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1.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 필요성

- 현재 보육시설 충족률은 80% 정도이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실제 부모들은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05년 6000억원, 06년 7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들의 선택권 확보 및 시설들의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코자 함.

□ 공 약

- 보육바우처(보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직접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소득수준, 아동연령 등에 따라 보육바우처를 차등으로 지급하여 부모들이 직접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평가에 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 보육교사 2교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정형화되어 취업 여성의 편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따라서 유연한 육아휴직제도와 직장복귀프로그램,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 환경 개선 필요.

□ 공 약

- 유연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를 반일 휴직, 시간제 휴직(1/4, 1/2) 등으로 다양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고용보험과 정부지원으로 직장복귀 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혹은 오후근무 등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남편의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에 가정에서 아동의 형제자매들끼리 지내는 비율이 1.7% 수준. 특히 취업모의 경우 2.7%에 달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및 가족기능 약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방과 후 시간에 아동 방치 및 방임을 예방할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

□ 공 약

- 방과 후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특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급식지원 사업 확충
- 현재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과 후 관련 각종 사업을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방과 후 아동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겠습니다.

4. 농어촌지역 및 긴급지원 가정에 특별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농어촌은 낮은 인구밀도, 열악한 교통, 우수한 보육교사의 부족 등으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보육환경임. 한편 어머니가 산후조리 중이거나 부모가 입원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대리아동양육자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일시보육사업이 필요함.

□ 공 약

- 농어촌 지역에 순회교사, 이동 보육서비스, 계절(농번기) 보육사업 등 특별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긴급한 가정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형 일시보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적으로 대리 아동양육자가 필요한 경우,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안

-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 훈련·지원의 ‘보모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방문형 일시보육사업과 특별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누구든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육아상담 및 육아정보를 얻고 지역거주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개방형 육아지원

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사회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육아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육아부담으로부터 일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공 약

- 누구나 언제나 이용할수 있는 '개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개방형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개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겠습니다.

1. 여성의 취업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 가장들은 사별 및 이혼 등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장이 된 경우가 많아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음. 저소득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육기간 동안의 생계비가 필요함.
또한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취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공 약

-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여성 가장들의 취업훈련 교육비와 교육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 취업훈련시 육아, 가사서비스 지원
-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경력관리·개발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에 여성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IT분야를 비롯 여성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관광서비스, 식품개발 등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 및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한나라당에 ‘여성일자리 창출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향후 민간부문에서의 여성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여성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지역내에 있는 다양한 여성 인력개발 관련 기관들을 기능별로 차별화·특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직업전문학교(21개), 기능대학(23개), 인력개발원(8개)의 교육과정에 여성적합 직종을 늘리고 여성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 양성평등한 부부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형성에 있어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의 재산에 명의가 없는 배우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외형적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부부 별산제가 실제적으로는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공 약

- 양성평등한 부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가족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부 또는 가족이 생활하는 주택 등의 경우

- 상호 동의를 받아 처분가능
- 혼인 중이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능
- 가사노동 가치를 고려한 재산 분할 가능

□ 추진방안

- 부부 평등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05년 이혼한 커플은 12만8,468쌍이나 되는 등 이혼, 사별, 가출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정서적,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문제, 사회적 소외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각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 공 약

- 이혼 숙려제 및 이혼전 상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이혼한 경우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또한 아동복리를 위해 양육비가 시급한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선급)하고 구상권 행사
 - 양육비 청구소송 대행 기관 설치

□ 추진방안

-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 미혼모 가정, 우리가 안아야 합니다.

□ 필요성

- 미혼모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풀어야 할 사안임. 대부분의 미혼모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공 약

-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함께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혼모 가정의 자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의 실시 및 취업알선·지원 서비스
- 성교육 강화 등 미혼모 발생 예방책 강구

□ 추진방안

- 「모·부자복지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미혼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3. 이주결혼여성 및 혼혈인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외국인과의 결혼은 전체 결혼건수의 13.6%에 달함. 특히 농어민 남성의 3분의 1은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국제이주 결혼여성 대다수가 의료 및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혼혈인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출생에서부터 차별과 놀림, 따돌림, 언어폭력, 폭행 등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공 약

-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실태조사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빠른 정착을 위해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혼혈인들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적 미취득기간 중 사회보장 적용으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안

- 「혼혈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정치현장에 여성의 대폭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사회참여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나 정치분야에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음.
 - 이제 정치에서도 여성의 욕구(needs)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30%이상 여성을 참여시켜야 할 것임.

□ 공 약

- 지방자치시대, 생활정치현장에 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미래세대의 여성 정치인을 양성·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전국 16개 시·도별로 기초단체장 1인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지역구는 30%이상, 비례대표는 5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겠습니다.

-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는 가능한 전원 여성후보로 공천
- 당내 여성 정치인을 양성·발굴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1.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7.5세가 길지만, 전체수명 중에서 질병, 장애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아,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 건강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공 약

- 매년 여성건강지표를 발표하고 한국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10대 청소년, 가임기 여성,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전국 보건소에 '여성건강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2.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 그동안 정부 예산을 통한 정책 집행에 있어 성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임.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영 전 과정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사회로 증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임.

□ 공 약

-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Sensitive Budget)가 도입·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 DB 관리를 통해 전 부처에 걸친 양성평등 정책 및 성별영향 평가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 '성인지 예산안 편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재정법」제정시 '성 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 부처 각 사업 성과 관리와의 연계를 위해 「국정평가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성 인지적 접근의 기초 자료인 성별 분리 통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성 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성 인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생치안 확보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 공 약

-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민생치안범죄를 방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로 보다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치경찰이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명·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같은 민생 치안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치안 인력 증강 및 장비의 현대화로 민생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흉포·광역·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범죄대응 역량의 획기적 개선

□ 공 약

-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이 안정된 치안질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조직폭력배, 성폭력 등 가정파괴범, 미성년자 및 부녀자 약취 유인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 3진아웃제(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 지역 집중 순찰, 여성전용 유치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1. 휴대폰을 통해 성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긴급구호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 혼자 사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국민들을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휴대폰에 대해 긴급호출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예방 효과 및 즉각적인 구호를 가능하도록 함

□ **공 약**

- 휴대폰 등을 통해 성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구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호출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 긴급호출 신고가 경찰 112 신고센터 등과 직접 연계되어, 실시간 구호활동
- 심장발작 등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재난 상황 등에서 즉각적인 구호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실종아동 발생시 아동의 현재 위치 혹은 최종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에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책가방에 장치하도록 하고, 독거노인의 경우 별도의 호출 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신고 등의 부작용 예방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아동 성폭력 살인사건과 연쇄 성폭력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 절실함. 한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함. 아울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한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화해야함.

□ 공 약

-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제재 장치(예: 전자팔찌 등)를 통해 제2, 제3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본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 지원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팔찌 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 성폭력 관련 법률의 대폭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 필요성

- 가정은 가족 구성원에게 휴식과 안정을 주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 그러나 2004년 가정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13,770건으로 하루 평균 40여 곳에서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음. 가정폭력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피해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므로 더 이상 가정을 범죄현장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 공 약

-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알코올중독 상담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폭력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가정폭력피해자 등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의료·법률·상담서비스를 위한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겠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문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1. 도서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필요성

- 독서는 지식과 정보의 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나 통계상 성인들의 월평균 책 구입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이에 독서문화를 진작시키고, 침체 되어 있는 국내 출판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

□ 공 약

- 도서구입비에 대해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2.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필요성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소비촉진을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이에 기업의 접대비를 문화비로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문화소비를 진작시키고 문화예술 수요를 촉진하여 문화예술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
- ※ 문화 접대비의 접대비 실명제 적용 제외 혜택이란 법인이 예술공연 관람권이 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비용이 50만원을 넘더라도 1인당 50만원이 안되면 접대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함

□ 공 약

○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절세효과를 부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기업의 접대비를 문화비(클래식공연, 오페라, 뮤지컬,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의 공연관람료)로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겠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 절세효과 및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창출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배당이익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문화산업분야 투자자금 운영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도입으로 해결됨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 창조산업인 문화산업을 육성할 필요

□ 공 약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이익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인 문화예술을 진흥하겠습니다.

1.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기초예술은 문화산업은 물론 사회 전 분야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근원임. 그러나 창작주체인 기초예술인들은 열악한 처우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초예술인들의 복지를 개선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위기에 처한 기초예술을 보호·육성해야 함

□ 공 약

-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전체 예술인 대상의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겠습니다.

2. 전통공예산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전통공예는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함축된 문화적 전통임과 동시에 문화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요소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공예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체계적·효율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공예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나 최근 한류열풍으로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이에 전통공예의 기술보전과 산업적 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공 약

- 전통공예산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추진방안

- 전통공예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겠습니다.
- 전통공예품 및 우수전통공예품 지정제, 전통공예가 인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통공예산업진흥시설(또는 전통공예촌)을 지정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겠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전통공예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겠습니다.

1. 국공립예술기관의 객석 10%를 문화소외계층과 나누겠습니다.

□ 필요성

-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못지않게 문화예술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공 약

- 국공립예술기관의 객석 10%를 문화소외계층과 나누겠습니다.

□ 추진방안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국공립예술기관의 공연객석 10%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과 나누겠습니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외국영화와 달리 한국영화는 한글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국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공 약

-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한글자막을 함께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서울의 호텔 숙박비는 세계 100대 도시 중 상위권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상위권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인근 관광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아시아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관광객 유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비싼 호텔 숙박비 문제를 해결할 필요

□ 공 약

-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객실요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1977년 이래 적용·폐지·한시적 적용 등을 반복하다가 2005년 1월 폐지된 상황

국민 통합적 기능을 가진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 비인기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대한체육회 53개 가맹단체 중 축구협회의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94.0%에 달하는 반면,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메달획득 종목인 탁구·레슬링·양궁 등의 가맹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2.0%, 15.8%, 3.1%에 그치고 있어 종목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 이에 올림픽메달 획득으로 국민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자아 내면서도 비인기의 설움을 겪는 스포츠종목을 지원할 방안 마련 필요

□ 공 약

-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단체 중 올림픽 등 국제대회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지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단체 중 올림픽 등 국제대회 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지원경기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 우선지원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2. 장애인종합체육시설(장애인선수촌)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 필요성

- 태릉선수촌과 같은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전용훈련장이 없어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훈련 때마다 현안 문제로 대두. 이에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및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로 활용될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2004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진입로공사를 완료함.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본격적인 시설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2008년 북경장애인 올림픽 대비 훈련을 위해 1단계 건립공사인 체육시설을 2007년까지 우선 완공해야 함

□ 공 약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장애인선수촌)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장애인선수촌)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겠습니다.

3. 돔 야구장을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한국야구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을 계기로 열악한 구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건립한 인천문학구장을 제외하면 잠실과 사직구장 등 모든 구장의 시설이 노후·낙후된 상황. 특히 일본에는 6개나 있는 돔구장이 하나도 없어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에는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없음. 국내 야구발전 및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돔구장 건립이 필요함.

□ 공 약

- 돔 야구장을 만들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고 지원 및 민자유치를 통해 돔 야구장을 만들겠습니다.

4.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하계·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개최해 스포츠 선진국 진입으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아시아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함. 올해 6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의 동계올림픽 개최 공식후보 도시 3~4개 선정 및 2007년 7월 개최도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전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공 약

-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지원과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언론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TV 수신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형상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KBS가 난시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부득이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를 수신해야 함. 그러나 전국 1만가구로 추산되는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수신료가 큰 부담이 되어 난시청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공 약

-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TV 수신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반반씩 들여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수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1.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정부·여당이 장기집권기반 마련 차원에서 개정한 신문법은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언론통제 의도를 담고 있어 언론자유에 심대한 위협이 되

고 있음

-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육성하여 언론 고유의 권력비판기능을 무디게 하고, 신문산업의 자유시장기능을 훼손하려 함

□ 공 약

- 신문도 다른 상품과 같은 기준의 독과점 규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문의 편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폐지하겠습니다.
-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규정하는 명예·권리 침해로 인한 ‘언론 피해의 배상’ 원칙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개선할 필요

□ 공 약

- 언론사내 고충처리인을 두는것은 언론사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위헌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KBS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KBS가 국민이 낸 시청료 등을 함부로 써 '04년 638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상태가 방만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은 게을리 한 채 '국고지원' 및 '시청료 인상' 만을 끊임없이 요구
- 더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국민 모두를 위한 방송이 아닌 특정세력에 치우친 편파적인 방송으로 전락
- KBS가 국민의 KBS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정체성 확립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공 약

- KBS의 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KBS 사장은 경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KBS의 예산·결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2. 음란·패륜방송을 강하게 처벌하여 건강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음란·패륜적 내용이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어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재발방지에는 도움이 안 되므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

□ 공 약

-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도입하겠습니다.
-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방송출연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출연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조치 명령과 방송출연정지조치 명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중지조치 명령을 받은 자와 방송출연 정지조치 명령을 받은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방송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방송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임명절차를 강화할 필요

□ 공 약

- 방송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방송위원들의 호선으로 뽑힌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혈세를
내돈같이 아껴쓰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1.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가의 중추 사정기관인 검찰이 대통령 측근 등 권력 실세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공 약

- 대통령 측근 등 권력 핵심인사와 판·검사가 관련된 부정·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면 국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통령측근등의부정부패수사를위한특별 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2.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이에 대한 미신고로 실제 보유재산의 가액과 신고된 가액 간에 차이가 생기는 등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공 약

-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부동산·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은 변동재산 신고시 가액의 변동까지 신고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재산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변동재산 신고시 가액의 변동까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 공 약

-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표결이 국무위원 인준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1.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97년 대선 당시 대기업 및 언론사 간부의 대화 내용 등을 불법 도청하였고 '94년부터 도청조직인 '미림' 팀을 불법으로 운영해왔으며, '98년 이후에도 유선전화 및 휴대폰 등의 불법도청을 자행해 왔음.

□ 공 약

-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도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겠습니다.

2. 국정원을 새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정원을 탈권력·탈정치화하고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익과 안보를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해야 함.

□ 공 약

- 세계 무대에서 산업보안, 대테러 활동 등 국익과 직결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공작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헌법기구화를 검토하고, 정치권여 금지, 예산통제방안, 내부승진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당에 국정원 개혁팀을 운영하여 국정원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통신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필요성

- 개인 정보의 전자화에 따라 국민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공 약

-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독점을 해소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4.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서민들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공 약

- 공익법무관제도를 확대하고 국선변호사를 대폭 증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와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지방출장소 확대로 무변촌을 해소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기관을 과감하게 M&A(통합)해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노무현 정부들어 더욱 늘어난 공무원과 기구로 인해 국민부담 가중
- 세계화 추세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국가경쟁력 강화

□ 공 약

- 유사 기구 통폐합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쓸모없는 위원회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중 지난 한해 회의실적 0-2회 위원회 37개(총 49개 중), 전무한 위원회도 11개
 -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은 전년대비 423억원 증가
 - 과거사 관련, 동학혁명 명예회복부터 추상적인 '진실0104화해위원회' 까지 기구만 16개, 예산은 1,800억원

□ 추진방안

- 기구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례 1 : 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와 소방방재청 통합
 - " 2 :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통합
 - " 3 : 중복 업무 성격의 위원회 통폐합
- 총리산하 정책평가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보고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매년 1회로 되어있는 정책평가위 활동을 연2회로 상향(1회는 매년 말 기존 방식 대로, 2회는 6월 국회에 전년도 평가사항 시정조치 등 추진상황 보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이나 정권홍보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국정홍보처가 언론보도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공무원들의 업무평가기준을 언론 대응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함으로써 정부기구 설치 취지에 반하는 업무를 해옴
- 더구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기능은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변경하고, 정책홍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 각 부처의 홍보업무와 중복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공 약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정부 홍보업무를 각 부처차원에서 자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여 언론자유 보장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기여하고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 늘고만 있는 공공부문의 규제 수를 확 줄이겠습니다.

□ 필요성

- 행정권은 말로만 규제개혁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02년 7,726건 / '03년 7,838건 / '04년 7,878건 / '05년 8,028건 / '06년 3월 현재 8,040건
- '03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약속한 '12대 국정과제'로서 규제 전반에 걸친 '규제일몰제' 적용 추진 약속 위반
 - 실제 규제 신설시 일몰규정 포함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공약 및 추진 방안

-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특단의 대책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 * '05년 6월 종료된 국회규제개혁특위 활동 점검 포함
 - 취지 : 말로만 규제 개혁이 아닌 실천 중심 특위 운영
 - 목표 : 최소한 매년 규제 건수가 감소되도록 견제와 대안 제시
 - 주요활동
 - ▶ 행정부(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 규제개혁단) 활동 촉진 및 국회 내 기구와 공조체제 구축
 - ▶ 구체적인 실천사항 분기별 발표 등
 - ▶ 작년 6월 발표된 국회규제개혁특위의 '61개 법률 72개 개혁과제' 집행 상황 점검

군의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군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만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해 전문의료단의 양적, 질적 향상 및 이에 필요한 의료체계 개선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하는 사례 다수
- 전문 의료인력 부족 및 시설 미비와 실질적인 군 의료 지원체계 미흡으로 군병원에서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사례들이 빈발 하고 있음.

□ 공 약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전문의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들을 대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장병들 에게 수준 높은 평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향후 5년간 국방예산 2,842억원을 건강증진 및 의료시설의 질적 향상에 최우선적으로 집행 되도록 하겠으며, 관련 시행령 및 제반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기회를 전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사병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의 장교와 부사관의 인력도 크게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여군인력을 전 병력의 5% 수준 (2만5천명)으로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 필요성

- 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장교의 7%, 부사관의 5% 수준(1만1천여명)으로 직업 군인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력증원 계획으로는 여성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음.
- 여성들의 국방참여에 대한 요구도 크게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만으로는 병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
- 특히 안보환경과 위협형태의 변화에 따라 군의 역할과 임무가 점차 정보전화,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우리군도 첨단화, 과학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의 국방참여는 세계적, 시대적 흐름인 동시에 국방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여군 인력의 확대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에도 확실한 보완책이 될 것임.

□ 공 약

- 2020년까지 여군인력을 전 병력의 5%로 증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여군인력 확충 비율 및 여성 사병지원 제도를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부터 혼혈인을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혼혈인들이 병역의무 제한으로 받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장교·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혼혈인 중 병역으로 말미암아 취업제한 등 경제활동 제약으로 상당한 제2차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
- 현행 법적, 제도적으로는 혼혈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병역제도와 병영문화는 여전히 혼혈인의 군 복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잔존

□ 공 약

- 한나라당은 혼혈인들의 군 간부임용 및 국방의 의무이행을 그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 「PKO활동을 위한 부대」, 「카투사 선발」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혼혈인들에게 배정하는 제도(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혼혈인들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먼저 병영문화에서부터 그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군내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병역법」 및 「군인사법」등의 법률개정을 통해 혼혈인 병역문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주민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의 실질적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북한주민이 같은 동포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북지원 체계의 확립 필요
 - 이미 04년, 05년에 걸쳐 북한인권을 위한 법안이 상임위에 제안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 계류, 무시되고 있음.

□ 공 약

- 「북한인권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 대북지원이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대북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수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체제를 만들겠습니다.
-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북한의 비인간적인 주민 탄압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의 기능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직접적인 유관부서인 이북5도청에서도 탈북자의 지원제도가 대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이미 해당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이 법제화 될 수 있는 모든 지원, 압력 채널 동원
 - ※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제) (05. 6. 27 황진하)
 - ※ 북한인권법(제) (05. 8. 11 김문수)
-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보호에 대한 검증체제로 강화 (감시단 구성 등)하겠습니다.
- 이북5도청이 탈북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2. “갈라진 우리 민족”의 생사확인·상봉·재결합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 필요성

-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간 체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 등이 시급함
-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대북지원, 6자회담, 남북 경협은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만 더 부여하고 키워주는 것이므로 대북지원, 남북경협을 모두 이런 문제에 연계시켜 나갈 것임.

□ 공 약

-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첫 번째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재결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상설면회소 설치 확대 및 고령자의 고향 방문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군포로, 납북자에 대한 확실한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군포로, 납북자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납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과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겠습니다.
 - 납북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위한 노력과 제도를 남북 경협이나 대북지원과 연계시키겠습니다.
- 예) 남북경협 지원 액수와 비울만큼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비율 확보

□ 추진방안

- 「납북자 가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겠습니다.
 - ※ 「납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제) 김문수 의원('05. 6. 24)
 -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 김문수 의원('05. 9.28)
- 「납북자 전담부서」를 두어 납북자 실태조사 및 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 ※ 현재 통일부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사회문화교류국의 1인이 담당하는 실정
- 기존의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문제를 다루는 기관들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와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1.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 실행원칙을 이행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북한 핵무기 문제는 한반도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남북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무조건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임.

□ 공 약

-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의 핵폐기를 연계시키겠습니다.
-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한 남북간 흥정이나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반드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입장을 같이하며 중국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대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북핵폐기 유도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북핵문제에 철저히 연계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북한의 위폐와 가짜 담배 및 가짜 양주 제조 등 국제범죄 행위를 적극 막겠습니다.

□ 필요성

- 북한의 위폐 제조는 우리 경제와 남북경협, 한미관계에도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북한 위조지폐 제조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범죄임. 이를 묵인하는 것은 바로 한미 관계와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
- 또한 이러한 사실의 묵인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욱 고립되고 더 많은 범죄(가짜 담배, 가짜 양주 제조)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같으며 북한 위폐가 남한 경제로 흘러들어올 경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임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 미국은 북한이 외환을 거래하는 은행과는 앞으로 경제적 협력이나 거래를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 공 약

- 북한위폐 제조 금지를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연계시키겠습니다.
- 북한의 불법·탈법 등 국제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북한위폐제조금지’를 요구하는 단체와 연대 구성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우리나라 은행이 북한이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의 거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고립’이 아닌 ‘공조·협력’ 중심의 외교시스템 확보와 안정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주변국과의 공조·협력 중심의 외교시스템을 확보하여 재외국민의 보호와 권익신장에 앞장서겠습니다.

□ 필요성

- 급격히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공조, 협력 위주의 외교시스템을 국제사회에서 확보하고, 아울러 외국에 거주·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 조치가 절실

□ 공 약

- 지금 정부의 반일, 반미 정책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공조, 협력 중심의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높여 국익 중심의 전략적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국제적인 인권, 도덕 수준에 맞는 외교정책을 펴나감으로써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대하겠습니다.
- 유학·관광·사업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납치나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국민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공조·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고 한미외교를 제고하겠습니다.
- 이메일 및 SMS 서비스를 통한 재외국민에 대한 수시 보호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정원, 외교부 등은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체계 구축 및 이를 적극 강화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재외국민에 대한 대 테러 안전교육 강화, 연락체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2.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통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세계무역 질서의 개편 그리고 한미 FTA 등을 앞두고 대책이 요망
 - 한미 FTA를 통하여 한미 안보동맹 체제가 경제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 관계로 전환이 된다고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중하고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이끌어 나가도록 사전 대비 철저

□ 공 약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가 이익 증진을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농·어업 등에 있어 입장 반영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강화하고, FTA에 따른 사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에 한미 FTA 대책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한미 FTA의 추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정부의 기본협상 전략에 대하여 국민과 야당에 보고
 - 피해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는 사전 대책 강구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실천약속

발 행 처 한나라당

발 행 일 2006년 5월 3일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나라당에 있습니다.